



주간통일정세 2009-50(2009.12.07~12.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5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양시내 현지도, 산학협력 강조(12/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곡산공장과 김일성종합대학 내 수영관 등 평양 시내를 현지도하고 산학협력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식료품 제조공장으로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곡산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생산공정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서 이 사업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또 김일성대 수영관을 방문해서도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지금 주체적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비롯해 부강조국 건설의 전투장 마다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며 김일성종합대학 출신들이 산업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에 만족감을 표시
 -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시내 현지도에는 최영림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기남·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재정계획부장, 박명선 내각 부총리 등이 수행
- **김정일, 연일 강계시 산업시설 시찰(12/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 국경에 가까운 자강도 강계시 산업시설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먼저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찾아 “정보산업시대 요구에 맞게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선차적 관심을 돌려 생산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 이어 김 위원장은 강계편직공장을 방문,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먹는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2대부문의 하나이므로 생산을 부단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
 - 강계포도술공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새로 조성한 맥주와 막걸리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만족을 표시했으며 “이 공장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자기의 특산인 포도술의 고유한 맛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재정계획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자강도 산업시설 현지지도(12/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부지방인 자강도 강계시의 ‘강계트락포르(트랙터)종합공장’과 새로 건설된 강계목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우선 강계트락포르종합공장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장의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실현함으로써 첨단돌파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들을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위원장은 또 염소와 토끼, 오리, 젓소 등을 사육하는 종합적인 대규모 축산기지인 강계목장을 둘러보면서 “강계목장은 강계시민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면서 목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당부장인 박남기 등이 수행

● **한해 ‘두 살’ 먹은 김정은(12/11, NHK)**

- 김정일 위원장의 3남 ‘정은’씨의 나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경부터 당초 설명해왔던 것보다 한 살 더 많은 27세로 변경했다고, 일본 NHK가 북한 내부 동향에 밝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 NHK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은 지난 6월쯤부터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정은씨의 출생연도를 1982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동안에는 1983년 1월 8일생이라고 설명해왔음.
- NHK는 그 배경과 관련,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元年)’으로 선전하고 있는 2012년에 30세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2년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70세가 되는 해임. 북한 당국자들은 실제 “김정일 위원장이 70세가 되는 2012년에 정은씨가 30세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함.
- NHK는 “북한 지도부는 정은씨가 조부의 탄생 100년이 되는 해에 부친과 함께 아주 좋은 나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카리스마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나이를 바꾼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은씨의 나이를 2012년에 맞춰 바꾼 것은 후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의 출생연도는 1942년 2월 16일로 알려져 있지만, 1941년생이라는 설도 있음.
- NHK는 정은씨가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만났다고 최근 보도



나. 정치 관련

● 北,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구상 비난(12/12,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2일 ‘수치도 모르는 자들의 기발한 발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달 초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생태, 평화벨트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DMZ를 돈벌이공간으로 이용하려는 흥계”라고 비난
- 신문은 군사적 대결의 상징인 DMZ를 돈벌이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의 또 하나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추태”라며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내외의 관광객들을 DMZ에 끌어들이려 하는 데는 관광객들을 이용해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일층 강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

● 北, 美와 견해차 좁힌 대화였다(12/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에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쌍방이 상호 이해를 깊이 했으며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고 공통점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고 설명, 그는 특히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인식이 이뤄졌다”며 “조(북)·미 쌍방은 남아 있는 차이점들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언급

● 조선신보, 북미 평화관계 확신서야 다자회담 나가(12/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조·미대화, 합리적인 해결방도 찾기’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북한)은 북미간의 교전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된다는 확신이 서야만 다자회담에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평양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자면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을 무작정 재개해도 평화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지난 6년간의 회담과정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줬다”고 밝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
- 신문은 “(미국은) 평화체제 문제를 9·19공동성명의 한 개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는 공동성명에 ‘평화체제’가 명기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실현은 구체적인 의제로 상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 “실무적인 성격을 띠었지만 (북·미) 쌍방이 앞으로 정치적 결단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출발을 뒀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

● 노동신문, 南 남북관계 외면하면 단호한 결심(1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오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남조선의 보수 당국이 화해와 관계개선을 외면하고 대결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단호히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 신문은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오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맺은 공동보도문, 조의특사방문단 파견, 추석 이산가족 상봉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그 사이 공식·비공식 접촉과 회담을 통해 우리와 한 합의와 약속을 모두 뒤집어 엮고 간신이 이어지던 민간급 내왕과 협력사업마저 봉쇄했다”고 주장
- 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며 “포로문제는 이미 정전협정 체결 때 다 해결된 문제이고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는 살길을 찾아온 의거 입북자는 있어도, 그 무슨 납북자는 애당초 있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

● 보즈워스 특사 평양 도착(11/8, 조선중앙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방송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조선 정책 특별대표와 일행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사실과 공항에서 영접한 북측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방송은 내보내던 음악을 끊고 여자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보즈워스 일행의 평양 도착 사실을 보도
-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8일 오후 2시 2분 오산 공군기지에서 특별전용기를 이용해 평양으로 출발, 보즈워스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대표,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니얼 러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찰스 루터스 NSC 비확산 담당 보좌관과 기록요원, 통역 등으로 구성



다. 경제 관련

● 北, 휴대전화 가입자 급증, 12만명 예상(12/9, AFP통신)

- 북한에서 휴대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만에 휴대폰 가입자가 급증해 내년 초까지 12만명의 이용자를 예상한다고 AFP통신이 9일 보도
- 원래 북한은 2002년 11월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정보 통제를 위해 2004년 서비스를 중단했다했었음. 그러다가 2008년 12월 15일부터 이집트 통신기업인 오라스콤과 북한 정부가 각각 75%, 25%씩 출자해 합작회사 고려링크를 설립, WCDMA 방식에 의한 제3세대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중임.
- 고려링크측은 “애초 사업 1년차에는 가입자 5만명, 3년차에는 12만명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11개월 동안 7만명이 넘어 기대 이상의 성공”이라고 말했다고 최근 방북했던 동아시아학 연구원 아라마키 마사유키(荒卷正行)는 전언
- 휴대폰은 중국산으로 가격은 200유로(약 34만원). 선불(先拂)카드를 통해 통화가 가능하며, 카드 종류는 3유로와 5유로짜리 두 종류가 있음. 민간인은 평양 시내에만 통화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함.

● 北 국정가격 공시, kg당 쌀 23원(12/13, 오늘의 북한소식; 데일리 NK)

- 북한은 최근 화폐개혁에 따라 새롭게 책정한 국정가격을 지난 9일 공시했으며 품목별로 보면 kg당 쌀 23원, 옥수수 8원, 밀가루 22원, 돼지고기 45원 등이라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13일 보도
- 북한 당국은 앞서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당시 수준으로 물가를 낮추겠다고 지난 4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밝혔는데, ‘7·1조치’ 당시 북한 당국이 지정한 쌀 가격은 kg당 44원이었음.
-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은 kg당 옥수수쌀 12원, 옥수수국수 10원, 두부콩 9~13원, 콩기름 50원, 무 5원, 인조고기 15원, 줄땅콩 10원, 맛내기 한 봉지 45원”이라고 보도
- 소식지는 이어 화폐개혁 이전인 지난달 28일 주요 도시지역 쌀값은 구화폐로 “평양 1천700원, 함흥 1천850원, 청진 2천원, 사리원 1천700원이었다”고 말해 신권대 구권의 교환비율이 1대 100임을 감안하면 쌀값이 화폐개혁후 옛날 돈으로 300~6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또 이들 네 도시의 화폐개혁 이전 옥수수, 밀가루, 돼지고기 등의 평균가격을 소식지를 참고해 계산하면 각각 737.5원, 1천687원, 5천450원으로 화폐개혁후 돼지고기만 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는 다 올랐음.
- 소식지는 “현재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가격을 보면 국정가격대로 판



매되는 품목이 몇 안된다”며 “거의 대부분 공시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첨언, 일례로 지난 11일 함경북도 청진시 시장에서는 쌀 1kg에 50원, 옥수수 1kg에 18원 등으로 공시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됐다고 소식지는 보도

- 그러나 돼지고기는 공시가격 그대로 판매됐는데 이는 “그동안 농가에서 곡식을 사서 술을 담근 뒤 그 술찌끼로 돼지를 길러 왔으나 화폐 개혁후 곡물가가 비싸지고 술도 잘 안 팔려 돼지 사육을 포기하는 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소식지는 설명
- 소식지는 또 화폐개혁후 “광산과 탄광의 노동자 월급이 기존 6천원에서 새 돈으로 8천원으로 인상됐다”며 “함경북도 탄광지구의 탄부들은 더 이상 부업을 하지 않아도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소개
- 그러나 데일리NK는 지난 11일 북한 양강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9일 폐막된 양강도 재정일꾼 실무회의에서 화폐개혁 직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가격조치가 발표되지 않아 북한 주민들 안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월 1천300원에서 2천500원 사이였던 노동자들의 임금을 (신권) 400원 전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발표됐다”면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군당 책임비서들의 월급은 1천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전언

● 北, 올해 곡물부족 심각할 듯(12/9, 연합)

- 북한이 올해 심각한 곡물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북한을 다녀온 온 유엔의 한 관계자가 9일 밝힘. 지난주 북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니엘레 도나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긴급사업국장은 이날 방콕으로부터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식량 수요를 맞추려면 100만t 이상을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추산한다”고 설명
- 도나티 국장은 북한의 올해 비료 사용량은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농가들이 비료 부족으로 피해를 봤다면에서도 올해 중순 몰아닥친 홍수가 수확에 큰 해를 끼쳤다는 지표는 없다고 설명, FAO는 북한에 한 해 식량과 가축 사료, 종자 등을 조달하려면 곡물 510만t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산

● 北은행, 미화 1달러 신권 35원에 매입(12/9, 오늘의 북한소식; 열린북한방송; 데일리NK)

-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환율이 ‘미화 1달러당 새돈 35원’으로 정해졌다고 대북 인권단체가 전언, ‘좋은벗들’은 9일 소식지에서 “신의주의 한 은행이 지난 7일 미화 100달러를 3천500원에 매입하고 3천800원에 판매했다”고 소개
- 화폐개혁 전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40원 수준이었으나 암시장 시세는 달러당 3천500원까지 높게 형성돼 있었음. 이번 화폐개혁이



‘100대 1’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공식 환율로 미화 1달러는 북한돈 신권 1.4원 수준이 돼야 함.

- 그런데 신의주 은행에서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환율은 공교롭게도 화폐개혁 전 북한의 암시장 시세와 비슷함. 이렇게 되면 북한돈 신권의 미달러 대비 가치는 화폐개혁을 전후해 갑자기 25분의 1로 절하된 셈임.
- ‘좋은벗들’은 또 “신의주에서 화폐교환 첫날인 10월 30일 신권으로 25원 하던 쌀 한 되가 12월 7일 에는 80원까지 올랐고, 돼지고기는 1kg에 100원, ‘고양이 담배’(정식명 크레이븐, 북영 합작기업 생산)는 한 packs 20원에 거래됐다”고 설명
- 한편 북한이 화폐개혁 단행에 따라 새롭게 책정한 국정가격이 9일 발표된다는 소식도 전해짐. ‘열린북한방송’은 이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공급소 등 공공시장과 각 지역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필품의 국정가격이 내각에서 정해져 12월 9일 하달될 것”이라고 밝힘.
- 이 방송은 이어 “국정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모든 상거래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며 “결혼식 등 이미 예정된 관혼상제에 필요한 생필품 값이 불안정해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 그러나 “당장에는 세대당 선물 현금 500원과 1인당 백미 7kg이 지급돼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소개
- ‘데일리NK’는 또 양강도 등지에서 재정일꾼 회의를 열어 화폐개혁과 관련한 임금 규정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당국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 가격이 국정 가격을 넘을 수 없다는 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김책공대, 신형 형광물질 개발(12/7, 우리민족끼리)

- 북한에서 빛에 잠시만 노출해도 10시간 이상 빛을 발하는 신형 형광물질이 개발됐다고 ‘우리민족끼리’가 7일 보도
- 우리민족끼리는 “이전의 형광체들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안정성이 낮았으며 보충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써 인체에도 해로웠다”며 “하지만 이번에 김책공업대학이 개발한 형광체는 종전의 제한성을 극복했다”고 소개, 이어 “종전에 비해 이 형광체의 제조원가는 20분의 1 이하이며 수명은 몇 배에 달한다”며 “이미 도로표지판, 가로등, 시계, 계기 눈금 등 여러 곳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

● 개천 수백만t 석탄매장 확인(12/4, 평양방송)

- 북한 지질학자들이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수백만t의 석탄 매장량을 새로 확인했다고 평양방송이 4일 보도, 방송은 “조양탄광 일대의 석탄 매장량을 새롭게 확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여 일대의 지질구조를 새롭게 해명하고 심부 석탄 매장량을 수백만t으로 확정하는 홀



룩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도, 방송은 또 채광량 확인에 따라 현재 새로운 탄광 개발설계가 끝나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언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CNC화(12/7, 조선중앙방송)

- 평안남도 대안군에 위치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가 북한 최초로 대형 공작기계의 컴퓨터수치제어(CNC)화를 실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 방송은 “16m 짜리 광폭선반을 비롯한 대형기계의 CNC화 실현됨으로써 발전기축 등 제품가공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며 “특히 350t 중량에 10층 아파트 높이만한 특대형 공장기계인 터닝반(turning盤, 수형선반)에 CNC 기술을 도입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보도
- 방송은 “기업소는 CNC 기계들을 이용해서 생산한 효율 높은 발전 설비를 영원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금야강발전소 등 중요 건설장에 보내 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

● 도별 식료품 공장 건설(12/6, 노동신문)

- 북한의 각 도에 종합 식료품공장이 들어서 일제히 시제품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
- 노동신문은 “지난 5월 착공의 첫 삽을 박은 각 도에서는 150일 전투기간 공사를 시작해 평양시, 함경남도 등지에서 이미 10월초 설비 시운전에 들어섰다”고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 지도하며 “모든 도에 종합적인 식품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현시기 경공업 혁명 방침을 관철하는 기본 문제”라고 지시

● 자체농사 농장 작년 1.3배(12/1, 평양방송)

- 농번기에 외부 노동력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작년의 1.3배로 늘었다고 평양방송이 1일 보도
- 평양방송은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는 분조관리제를 실시해 농장원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체로 농사짓는 농장을 확대했다”고 소개, 방송은 또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이어오며 투쟁열기가 더 높아져 가을걷이 시기에는 모내기철에 비해 500여개나 더 많은 농장들이 지원노력을 받지 않고 영농작업을 진행했다”고 전언

● 김일성대, 여성질병 예방 건강식품 개발(12/7, 우리민족끼리)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식물생물화학과의 이 대학병원 의사들은 최근 식물의 천연활성물질을 이용해 약리작용이나 예방치료 효과가 큰 새로운 복합기능성 건강식품을 연구, 완성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7일 보도
- 이 건강식품은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건강보호에 좋을 뿐 아니라 유



선증, 노년기 골송소증을 비롯한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고 핏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세척하며 말초핏줄을 확장시켜줌으로써 심장혈관계통을 보호하는데도 좋다고 매체는 소개

라. 군사 관련

- **北, 2차 핵실험서 플루토늄 5kg 사용 추정(12/12,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이 지난 5월 실시한 제2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 5k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 방송은 ‘국제핵물질위원회(IPFM)’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2006년 10월에 실시한 1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2kg 사용했으며 올해 5월 2차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 5k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현재 34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 같다”고 밝힘.
 - IPFM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통해 ‘수 kt’의 폭발력을 얻었다”고 밝혔는데 1kt의 폭발력은 고성능 폭약인 TNT 1천t을 폭발했을 때 나오는 폭발력을 의미
 -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을 경우 추가로 8~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 북한은 기존에 추출한 플루토늄을 포함해 총 34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 보고서는 “북한이 5개 미만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공산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고 VOA는 보도
- **北전투기, 동계훈련 강화(12/12, 연합)**
 - 북한 공군 전투기들이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계훈련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군 소식통은 12일 “북한 전투기들이 동계훈련이 시작된 최근 이·착륙 비행과 원거리 비행훈련을 횡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 황해도 상공에 설정된 전술조치선(TAL)에 접근 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임. 북한 전투기가 이 선에 근접하면 우리 전투기가 즉시 발진하도록 되어 있음.
 - 소식통은 “지난 9일 오전에는 전투기 1대가 전술조치선을 넘어와 우리 공군 KF-16 등 전투기 6대가 대응기동을 하자 4분여만에 돌아갔다”면서 “이런 상황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전언, 북한 전투기들은 지난 1월 17일 이후 5월까지 전술조치선을 1천87회나 접근한 것으로 알려짐.



- **평양밑 300m에 지하세계, 김정일 중(中) 도주용 땅굴(12/8, 연합뉴스)**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7일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에 출연해 “평양 지면 아래 약 300m 지점에 지하철도(지하철)와 다른 제2의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비밀 땅굴’은 유사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위한 대피로이며 남포·순천 등 평양 주변 40~50km까지 뻗어 있다고 황 전 비서는 밝혔다.
 - 그는 방송에서 “지하철도 공사를 책임지던 경비대장이 찾아와 병사들과 대학생들(황 전 비서는 김일성대 총장을 지냈음) 간의 폭행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공사 현장에 초대했다”며 “지하철도로 내려간 뒤 그 깊이만큼 더 내려간 곳에 땅굴이 있었다”고 설명, 이런 비밀 땅굴과 지하시설은 “평양 곳곳에 부지기수”라는 말도 했다고 함.
 - 황 전 비서에 따르면 평양에서 직선 거리로 약 40km에 위치한 순천의 자모산까지 뚫린 땅굴에는 깨끗한 샘물과 새파란 풀이 있었고, 직선 거리로 약 50km인 묘향산 인근의 영원까지도 땅굴이 연결됐다는 것임. 특히 “평양 삼석구역 철봉산 휴양소에서 남포항까지 땅굴을 뚫어 놔는데 이곳을 통해 유사시 (김정일 등이)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은 6·25전쟁 휴전 직후부터 땅굴 건설에 집중 매진했으며 이들 땅굴은 한때 방북한 소련 군사대표단이 감탄했을 정도로 정밀함을 자랑하고 있다”고 전언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신종플루 예방대책 공개회의(12/13,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이 신종플루 발생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직전인 12월 7일 내각 보건성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한 공개 전원회의를 북한 전역의 시, 군당별로 개최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13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은 “전원회의에는 시·군 보건부문 일꾼과 인민병원 책임일꾼들, 농촌 리진료소 소장과 학교 교장·부교장 등 보건부문과 교육부문 일꾼 전원이 참석했다”며 “신종독감(플루)을 공개적으로 전면 검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
 - 소식지는 “얼마 전만 해도, 극소수 책임자만 모아 비밀리에 대책을 논의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힘. 소식지는 “보건성은 중국 정통편과 국내산 아스피린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국에 내렸다”며 이는 평안남도 지역에서 신종독감에 걸린 환자에게 정통편과 국내산 아스피린을 먹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소개
 - 함경북도에서는 다른 지방 여행자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통행단속 강화 지시가 내려졌고, 가정마다 감기 증세가 보이는 가족의 바깥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했다고 소식지는 전언



- **평양서 고구려 침성대 유적 발굴(12/11, 조선신보)**

 - 평양 중심의 대성산 일대에 건설중인 평양민속공원 부지 내에서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진 침성대 유적이 발굴됐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유적은 대성산 소문봉 남쪽 기슭 안학궁터 서문에서 서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과 석회를 다져서 쌓은 사각형의 중심시설과 그 외부를 둘러싼 칠각형의 보조시설로 이뤄져 있음.
 - 조선신보는 북한 고고학자의 언급을 인용, “새로 발굴된 건축터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의 대성산 일대에 정하고 있던 427~586년 축조하고 이용한 침성대 유적”이라며 하늘의 해와 달, 별을 관측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소개
 - 또 평양민속공원 부지 내에서는 고구려 시기 벽화무덤도 새로 발굴

- **북한, 개성공단 통해 남한서 신종플루 전염(12/10, 열린북한방송)**

 - 북한 보건당국이 현재 북한에서 확산 중인 신종플루가 남한으로부터 전염됐다고 선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 대북 라디오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1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보건당국이 지난 5일 평양 시내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 책임자와 각 지역 보건담당일꾼들에게 신종플루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현재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신종플루는 경제협력모델인 개성공단을 통해 남조선에서 온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전언
 - 방송은 또 “이번 지시에서는 대학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교육기관은 12월 5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일제히 방학에 들어가도록 지시해 갑자기 일시에 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평양역에는 기차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언
 - 조선신보는 9일 이와 관련해 “신형독감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평양 시내의 모든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예년보다 20여일 앞당겨 7일부터 겨울 방학에 들어갔다”고 보도

- **北, 신종플루 WHO 보고, WHO,백신 지원할 듯(12/10, 미국의소리 방송)**

 - 북한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다고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WHO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9건의 신종플루 확진 사례를 보고해왔다”며 “평양에서 3명, 신의주에서 6명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
 - 대변인은 또 “북한이 뛰어난 기초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 재고도 충분해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이 신종플루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장 북한을 지원할 계



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대변인은 그러나 “인도 뉴델리에 있는 WHO 동남아 총괄사무소가 현재 북한 당국과 긴밀히 접촉하며 의약품 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항생제 등이 지원될 수도 있다”라고 소개

● **北, 평양·신의주서 신종플루 9명 확진 발표(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양과 신의주 등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한 사실을 공식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9일 일부 지역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보도, 통신은 “세계적으로 ‘A형 돌림감기’(신종플루)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신형 독감이 발생했다”며 “보건성에 따르면 신의주와 평양에서 확진된 환자가 9명”이라고 보도
- 통신은 이어 “해당 기관에서 신형 독감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검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치료사업을 마련중”이라고 보도

● **北, 새 돈 차명교환 2명 총살(12/8, 열린북한방송)**

- 최근 화폐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차명으로 돈을 바꾸다 적발된 주민들을 총살했다고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 ‘열린북한방송’이 8일 주장
-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도 초과 구권 화폐를 편법으로 바꾼 평남 평성의 화폐 장사꾼 2명이 4일 비공개 총살당했다는 사실이 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면서 “이들은 장사로 번 구권 1천100만원을 아는 사람들에게 10만원씩 바꾸게 해 1대 1로 나눠가졌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도
- 북한의 화폐개혁에 따른 구권 교환 한도는 가구당(4인 기준) 30만원으로 알려짐.
- 방송에 따르면 또 신.구권 교환이 이뤄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정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고 화폐를 버리거나 불 지르는 것과 같이 화폐개혁에 반하는 행위를 엄벌하라는 지시가 보위부를 통해 시달림. 방송은 “지난 4일 함북 청진 수성천에 1천원 등 구권이 많이 든 배낭을 누군가 버린 사건이 있었다”며 “보위부는 주범을 색출하려고 전문 그루빠(그룹)까지 만들었으나 아직 잡지 못했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은 집집마다 설치된 유선 스피커 시스템 ‘3방송’을 통해 화폐개혁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한편 ‘화폐개혁의 목적은 노동자, 농민의 생활수준을 똑같이 하려는 것과, 장사꾼을 없애고 이전처럼 국가가 정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 두 가지’라는 요지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을 전역에 보냈다고 이 방송은 전함

● **돈 빼앗긴 이즘마들 이판사판 저항(12/8, 조선일보)**

- 북한이 7일부터 새 화폐 사용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 화폐개혁의 최대 난관은 40~50대 ‘시장 이즘마들’의 분노일 것이라고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언, 북한에서 시장 상인 대부분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40~50대 여성들인데, 이들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모은 돈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장사마저 어렵게 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

- 한 내부 소식통은 “‘함경도 또순이’ 등 역척 아줌마들이 극도로 화가 났다”며 “시장은 김정일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 상황이 절박한 ‘아줌마들’은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 당국을 비난, 이 소식통은 “젊은 보안원들이 제지를 하지만 아줌마들은 ‘개×× 꺼져라’, ‘넌 부모도 없느냐’며 거세게 항의한다”고 전언

● 北, 신종플루로 한달 조기방학(12/7,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내에서 신종플루가 빠르게 퍼져 각급 학교들이 한 달 앞당겨 겨울방학에 들어갔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7일 소식지를 통해 보도
- 단체는 소식지에서 “북한의 보건성과 교육성 일꾼들이 독감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교육성이 방학을 한 달 앞당기기로 결정해 학교들이 지난 4일 겨울방학에 들어갔다”고 밝힘.
- 북한에서는 원래 새해 1월 초에 대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학교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됨.
- 이 단체는 ‘평양시 시당 교육부 일꾼의 보고’라고 하면서 “11월 한 달 중 20일 동안 21세 대학생 환자 2명, 23세 대학생 환자 1명, 8.28 청년돌격대 2명 등 7명의 청년 사망자가 나왔다”며 “평양시에서는 11월 초에 1명이 사망하고, 26일쯤 1명이 추가 사망해 모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언
- 이 단체는 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최근 돌고 있는 신종 독감이 중국 단둥시와 인근 국경지역에서 넘어온 전염병이라 단정했다”며 “보안당국은 국경 출입 상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단둥·신의주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철저히 검진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

● 北, 외국인 관광 내년 초까지 일시 중단(12/7, 중국 인민일보)

-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의 북한 내 관광을 일시 중단키로 했으나 화폐 개혁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7일 보도
- 신문은 북한 세관의 업무가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지돼 이달 10일부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에 나설 수 없게 된다고 전언
- 이와 관련 충칭(重慶) 등 중국 내 일부 여행사는 최근 단행된 북한의 화폐 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다루는 단둥(丹東)지역 여행사들은 “해마다 있어 왔던 관행으로 화폐 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밝힘.



- 외국인의 북한 관광은 1월이 돼야 재개되며 신의주 등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1일 코스의 변경 관광은 외국인 관광 중단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시행됨.
- 한편 인민일보는 화폐 개혁 조치 이후에도 중국인들은 북한에서 자유롭게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어 관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전언

● 北, 시장거래 6일째 끊겨, 후유증 장기화(12/7, 연합)

- 북한의 화폐개혁에 따른 통화교환 마지막 날인 6일, 압록강 너머 신의주를 마주 보고 있는 단둥(丹東)은 쓸쓸한 모습. 북한의 보따리상들을 상대하는 단둥 세관 주변 거리는 한적했다. 20~30개 일용잡화도매 가게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화폐개혁 발표 이후 손님이 반 이상 줄었음.
- 주방용품을 파는 D 상점의 점원은 “경비 버스를 타고 넘어와 박스로 물건을 떼가는 북한 사람이 크게 감소했다”며 “지난 5월 2차 핵실험 직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언급, 단둥을 이용한 북한과 중국 간 공식 국경 무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를 결제 통화로 이용하기 때문임. 그러나 북한 화폐 교환이 필요한 보따리상과 임가공(賃加工) 무역 등은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고 현지 무역상들은 전언
- 북한 무역에 종사하는 조선족 김모(46)씨는 “아직 새 화폐의 환율이 결정되지 않아 북한 내에서 환전상들이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북한 내 일반 상품점은 물론 ‘장마당(시장)’까지 거래가 끊겼다”고 언급
- 평양 내 임가공 봉제공장에서 의류를 공급받고 있는 사업가 홍모(56)씨도 “화폐개혁으로 북한의 민심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언, 그는 “봉제공장 공원들이 임금을 구(舊) 북한 화폐는 물론 중국 위안화로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북한에 이어 중국까지 화폐 개혁을 한다는 헛소문이 나돈다고 한다”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北무기 목적지는 우크라이나(12/13, 더 네이션)

- ‘미사일 등 북한산 무기 35t을 운송하다 태국 당국에 억류된 수송기의 최종 목적지는 우크라이나’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태국 현지 신문인 더 네이션이 13일 보도
- 재급유를 위해 태국 돈므엥 공항에 착륙한 뒤 억류된 동유럽 국적이 수송기 조종사인 미카일 페투코(벨로루시)는 경찰 조사에서 “우



크라이나를 출발해 북한에 도착, 상품들을 실었다”면서 “평양을 떠나 돈므엉 공항과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화물을 내려놓을 예정이었다”고 밝힘.

-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평양으로 가는 동안 아제르바이잔과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등에서 세차례 재급유를 받았다”고 주장, 페투코의 증언이 나오기 전에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테러범들이 암약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중동 지역 등이 최종 목적지로 거론됐었음.
- 페투코는 비행 일정에 대해서는 순순히 자백했지만 자신과 동료 승무원들의 무기 운송 혐의는 전면 부인, 그는 “수송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상품 수송을 위해 고용됐다”며 “수송기에 무기가 적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 한편, 스리랑카군은 이날 태국 당국에 억류된 수송기가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 우다야 나나야카라 스리랑카군 대변인은 “수도인 콜롬보에 착륙하기 위해 착륙 허가를 신청한 북한 비행기가 없었다”고 밝힘.

● 泰, ‘압류 北 무기보고서’ 45일내 유엔 제출(12/13, 연합뉴스)

- 태국 정부는 평양발 수송기에서 압류한 북한 무기와 관련한 보고서를 45일내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더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13일 보도
- 타니 통팍데 태국 외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무기 선적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태국 정부는 또 북한산 무기를 수송기에 적재한 조종사 등 승무원 5명을 이르면 14일 법원에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태국 법과 유엔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며 “태국 당국이 승무원에 대한 혐의를 조만간 확정해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
- 억류된 수송기는 그루지야 국적이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아피싯 총리는 “보안 및 정보기관이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며 “문제의 수송기가당초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최종 목적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

● 泰, 北 미사일 등 적재한 수송기 억류, 조종사 등 5명 조사, 무기 35t 압수(12/12, 연합뉴스)

- 미사일과 폭약 등 북한제 무기를 적재하고 평양을 출발했던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태국 돈므엉 공항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한 뒤 태국 당국에 억류됐다고 교도통신 등 외신과 태국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
-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대변인은 “문제의 수송기 조종사가 12일



- 오전 재급유를 위해 돈므엥 공항 착륙을 요청했다”며 “이 수송기가 공항에 착륙한 뒤 당국이 수송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를 발견, 수송기와 조종사 등을 억류하고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힘.
- 파니탄 대변인은 “압수된 무기들은 태국 중앙부의 나콘사완주(州) 타크리 공군 기지로 이송됐다”며 “억류된 조종사들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
 - 안보담당인 수텝 타웅수반 태국 부총리는 “억류된 조종사 등은 당초 수송기에 원유 시추용 장비들을 운반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송기 검사 과정에서 무기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
 - 또 태국 당국이 구체적인 압수품 목록을 아직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미사일과 폭약, 대공화기 발사대, 로켓포 등 35t 정도의 무기가 수송기에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파니탄 대변인은 “조종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제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유엔 당국의 의견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이 수송기의 출발지와 관련, 몬톤 수추콘 태국 공군 대변인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문제의 수송기는 북한 수도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공군 당국이 억류된 항공기에 대해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 목적지에 대해서는 억류된 수송기가 올해 중반 내전이 종식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태국 현지 방송들은 태국 당국이 미국측 정보를 받아 이 수송기를 억류했다고 보도했지만 태국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수송기에 다량의 무기가 적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수송기 억류는 정보 기관들의 공조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

나. 북·미 관계

● 보즈워스, 6자회담 재개 인내심 필요(12/12,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8~10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언급
- 11일 베이징에 도착한 보즈워스 대표는 중국 관리들과 방북결과 협의의 마친 뒤 12일 오전 숙소인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언급, 보즈워스 대표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는 전략적 인내심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언급



- 그는 평양 방문 결과와 관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장과 만나 매우 실무적이고 솔직하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건설적이고 유용한 대화를 했다”면서 “6자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또 9·19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을 재개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
- 보즈워스 대표는 북·미 양자간 추가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추가 양자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이번 대화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강조
- 그는 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쌍방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간단히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전날 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잇따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
- 보즈워스 대표는 12일 오전 일본 도쿄로 출발했으며 1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들른 뒤 15일 워싱턴으로 돌아감.

● 美 대북인권특사 방북 추진(12/12, 연합)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중인 킹 특사는 지난 9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북한 방문) 비자를 내줄 것을 북한측과 접촉해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미 국무부가 11일 공개한 기자회견 녹취록에 따르면 킹 특사는 “취임한 지 보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접촉을 하지는 못했다”고 부연 설명
- 킹 특사는 이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에 진전을 이루고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이 미·북관계 정상화의 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음. 그는 “핵심적 문제인 핵 문제에 대한 대화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우려를 다룰 대화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킹 특사는 또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에서 (식량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요구가 맞아떨어진다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기꺼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어떤 정치적 고려와도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



● 美, 북과 계속 접촉할 것(12/12, 연합)

- 미국 국무부는 11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후속 조치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 및 북한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engage)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진전 방안을 조율해야만 한다”고 언급,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도 역시 접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 고위급대화 개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원할 경우 이에 응할 방침임을 시사하였음.
- 켈리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입장 발표에 대해 “놀라운 것이 아니다”면서 “보즈워스 대표가 이해한 것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 그는 “(북한의 입장 발표 내용) 확실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를 긍정적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
-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언급한 ‘미국과의 의견차이’에 대해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고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차이”라면서도 “북한에서 보는 차이점은 그들이 말해야 하는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

● 美, 미·북대화 좋은 출발, 대북제재는 계속(12/11, 연합)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0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열린 북미대화에 대해 “이번 대화는 미국과 북한의 관리 사이에 1년여만에 열린 첫 고위급 만남”이라며 “좋은 출발점(good start)이라고 성격을 규정한다”고 언급
-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즈워스 대표가 이미 언급했듯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관해 북한으로부터 좀 더 분명한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
- 그는 특히 “북한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회담을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할지 여부와 어떻게 복귀할지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좀더 분명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림.
- 그는 북미간 후속 고위급 대화 개최 문제와 관련, “(북한이 입장을 전달할) 수단이 전화가 됐건 다른 대화가 됐건간에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2차 북미간 대화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이와 관련, 그는 “그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특정한 루트를 취할지는 예견하지 않겠다”고 북미간 직·간접적 접촉이 계



속될 것임을 시사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에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평화협정 문제도 들어있는 2005년 공동성명 문제를 논의했다”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6자회담 틀내의 양자회담의 맥락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답변
-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압력은 계속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874호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을 북한이 내리도록 압력을 계속 넣을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가 계속 될 것임을 분명히 함.
- 앞서 클린턴 장관은 북미대화 결과에 대해 “예비대화(preliminary meeting)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 北, 6자회담 복귀 더 두고 봐야(12/10,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10일 서울로 돌아와 “미·북 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힘. 하지만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음을 시사
- 보즈워스 대표는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했음.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만남은 요청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다”며 “평양에서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부상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
- 그는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

● 클린턴 국무장관, 北 6자회담 복귀 설득 희망(12/8,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복귀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문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및 (6자회담) 참가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득하는데 성공적일길 분명히 바란다”고 언급
- 한편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콘퍼런스 콜 브리핑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목적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힘.

● 美, 보즈워스, 김정일 면담 추진안해(12/7, 연합뉴스)

- 미국은 7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목적은 6자 회담 재개라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문제는 이번 방북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하루 앞둔 정례브리핑에서 “명백히 우리의 목적은 6자회담 재개”라고 언급
-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 북한과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그것은 우리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 이와 관련, 그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양자간 실무그룹이 마련돼 있다”면서 “그것이 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보즈워스 대표는 매우 단순한 의제를 갖고 평양에 갈 것”이라면서 “이는 6자회담의 재개를 확실히 하고, 2005년 9월의 공동성명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

다. 북·중 관계

● 경제무역대표단 中서 귀환(12/12, 조선중앙방송)

- 구본태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린 북·중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12일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中, 한반도 긴장완화 기회 포착해야(12/10, 연합뉴스; 신화통신)

- 중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한반도의 긴장완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고 유관 당사국들에 촉구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유리한 시기를 잘 포착해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상궤도로 하루빨리 돌아오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장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관 당사국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 그는 “보즈워스 대표는 이미 방북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다”면서 “11일 베이징에 도착해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하고 방북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설명
- 장 대변인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미간 양자대화 결과를 놓고 북한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이 같은 정보는 없다”고 대답
-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보즈워스가 평양 순안공항에



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北 6자회담 재개 의사 환영(12/11,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천명한 데 대해 올바른 방향의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
-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평양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떤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대화를 지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환영하며 양측이 이번 접촉을 통해 ‘실무적’ 대화를 나눈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그는 이어 “미국과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통의 언어를 발견하기 바란다”고 첨언
- 한편,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6자회담 관련국 순방에 나선 보즈워스 대표는 오는 14일 모스크바를 방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만나 이번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

● 김영남, 러 폭발사고에 위로전문(12/7, 연합)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우랄지역 페름시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폭발사고와 관련해 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 김 상임위원장은 전문에서 “나는 귀국의 페름변강에서 일어난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해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

마. 북·일 관계

● 北·日, 납북자 관련 대화에 ‘속도’(12/13, 연합)

-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12일 일본에 들러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에게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 북한간 대화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고 전언

● 하토야마, 북한, 필요하면 가겠다(12/11, 지지통신)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이 11일 보



도,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위한 방북 가능성과 관련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갈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아직 방북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방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음.

-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오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정부로서 한시라도 빨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힘. 그는 납치피해자의 귀국 실현과 진상 규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 민주조선,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는 범죄행위(12/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9일 ‘용납될 수 없는 우주 군사화 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H2A 로켓에 실어 다섯번째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 대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 신문은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는 주변나라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내탐하기 위한 첩보활동”이라며 “이에 반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는 우주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할 실용위성 개발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활동”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 반동의 군사대국화 책동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3. 대남정세

● 정부, 타미플루 분배투명성확보 北과 협의(11/11, 연합)

- 통일부는 11일 북한에 타미플루 50만명분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지원의 목적에 맞게 분배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분배투명성은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
- 이 부대변인은 다만 “분배투명성의 정도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원하는 품목이나 전달되는 절차 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고 부연,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분배투명성이 어느 지원에서나 중요하지만 타미플루의 경우 다른 대북지원품과 달리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
- 이 부대변인은 이어 타미플루 외에 다른 지원품을 함께 보낼 가능성에 대해 “손 소독제 등을 포함해서 신종플루 예방 또는 신종플루 확



산에 대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품목들도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

● **北, 남측의 타미플루 지원 받겠다(12/10, 연합)**

- 북한이 10일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임.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전화)을 통해 신종플루 관련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북측에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북측은 같은 채널을 통해 우리측 지원 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
- 10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북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무제한 공급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현 장관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했고, 마스크와 손 소독약, 진단기 등 신종플루 대처에 필요한 부대 장비와 의료진 및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 남북은 11일부터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남북, 12~22일 中·베트남공단 합동시찰(12/10, 연합)**

- 남북한은 오는 12~22일 중국의 칭다오(靑島)와 수저우(蘇州), 선전(深圳), 베트남의 엔퐁 공단을 합동시찰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10일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 시찰단은 오는 12일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13~14일 칭다오, 15~16일 수저우, 17~18일 선전 공단을 방문한 뒤 19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의 엔퐁 공단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 시찰단은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해외 공단의 투자환경과 공단 운영시스템, 출입·체류, 노무 관리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또 공단별로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현지 운영실태 등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
- 이번 공동시찰의 남측 단장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북측 단장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임. 이들은 지난 6~7월 세차례 열렸던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남북한 수석대표였음.
- 이번 시찰에는 남북 각각 10명이 참석, 남측에선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인사가, 북측에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관련 기관의 실무인원 등이 참석할 예정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보즈워스 “6자회담 재개 인내심 필요”(12/1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8~10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함.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보즈워스 대표는 중국 관리들과 방북결과 협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숙소인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보즈워스 대표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는 전략적 인내심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함. 그는 평양 방문 결과와 관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매우 실무적이고 솔직하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건설적이고 유용한 대화를 했다”면서 “6자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또 9.19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을 재개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함.
- 보즈워스 대표는 북·미 양자간 추가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추가 양자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이번 대화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쌍방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간단히 언급함.
- 보즈워스 대표는 전날 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잇따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함. 그는 “중국 측에 방북 논의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나머지 5자가 일치된 의견으로 전략을 점검하고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함.
- 그는 “미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이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과 6자회담 추진을 위해 보여준 노력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덧붙였음. 보즈워스 대표는 12일 오전 일본 도쿄로 출발했으며 1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들른 뒤 15일 워싱턴으로 돌아감.



● 러시아 “北 6자회담 재개 의사 환영”(12/12)

- 러시아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천명한 데 대해 올바른 방향의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평양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뚫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대화를 지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공동인식”에 도달했다면서 미국과 차이점을 좁히고자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앞서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환영하며 양측이 이번 접촉을 통해 ‘실무적’ 대화를 나눈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미국과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통의 언어를 발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을 시작으로 6자회담 관련국 순방에 나선 보즈워스 대표는 오는 14일 모스크바를 방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만나 이번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또 보즈워스 대표는 15일에는 라브로프 장관과 함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지난달 북한을 다녀온 자크 랑 하원의원을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우리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7일 모스크바를 찾아 보로다브킨 차관과 회동, 북·미 접촉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후속 조치 등을 협의할 예정임.

● “6자회담 재개-9.19이행 공동이해 도달”(12/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10일 서울로 돌아온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 재개여부와 관련, “미·북 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북한이 동의했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6자 당사자간에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기간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 한차례 회동하고 김계관 부상 등 외무성 고위관리들과 수차례 만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일정한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가 우선돼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 보즈워스 대표와 북한의 외교정책을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강석주 외무성 부상간의 만남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 시점 등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북·미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 보즈워스 대표는 회견에서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공동성명의 중요대해 어느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며 “9.19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이행했던 작업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강조함. 보즈워스 대표는 또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고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북한측에 9.19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의 완전 이행에 대해 확인하고 의지를 확인해줬다”며 “모든 요소는 비핵화, 평화체제, 6자회담 당사국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지원을 포함한다”고 말함.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주장과 관련,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의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가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로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및 친서소지 여부와 관련,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바로 메시지”이라고 설명함. 그는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한 뒤 평양방문 내용을 본국에 전화보고했으며 앞으로 며칠간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말함.
 - 이날 오후 보즈워스 대표와 면담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용한 대화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힘. 또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추가 대화여부와 관련, “(북·미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북·미간에 뉴욕 대화채널이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 만큼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보즈워스 대표는 10일 저녁에는 유명환 외교장관과 만찬 회동을 했으며, 11일 낮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중국으로 이동해 중국 고위관리들과 만나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이어 12일 일본 도쿄, 1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차례로 방문한 뒤 15일 워싱턴으로 돌아감.



나. 미·북 관계

● “북·미, ‘평화협정은 4자대화서 논의’ 양해”(12/13)

- 북·미 양국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대화’를 가동, 논의하기로 양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북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열린 양자 대화와 직전의 협의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해결하는 한편 평화체제 문제는 4자대화에서 다루기로 공감함.
- 평화체제 문제를 4자대화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특사가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양국이 공동 발표한 북·미 공동코뮤니케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지난 9년전 민주당 정권이었던 클린턴 정부와 북한과의 합의가 되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 보임.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보즈워스 특사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체제와 관련해 4자회담을 가동하자는데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 소식통은 “평화협정 논의를 북·미 대화가 아닌 4개국간 대화에서 하자고 한 것은 북한이며, 미국이 이에 동의했다”고 말함.
- 2000년 10월 북한의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미했을 때 합의한 ‘조미공동코뮤니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 2005년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도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있음.
- 이와 관련, 보즈워스 특사는 지난 10일 방북후 가진 서울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6개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북·미 양국은 또 평화체제 논의와는 별개로 비핵화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공통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보즈워스 특사는 지난 9일 강석주 제1부상과 한차례 2시간 동안 회동했으며 이 자리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반도의 비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6자회담 재개의 근본 과제라는 뜻을 강조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요소(평화협정,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를



- 한편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및 접근을 허용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 대북인권특사의 방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北외무성 “美와 차이점 좁히려 협력”(12/11)

- 북한은 11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견 차이점을 좁히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완료 하루만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쌍방이 상호 이해를 깊이 했으며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고 공통점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고 밝힘.
- 그는 특히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인식이 이뤄졌다”며 “조·미(북·미) 쌍방은 남아 있는 차이점들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거의 유사해 눈길을 끄. 보즈워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 및 9.19공동성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6자 당사자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 외무성 대변인은 또 “쌍방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 기간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김계관)과 회담을 진행했고 외무성 제1부상(강석주)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산기사에서 북·미간 추후 의견 조율 사안과 관련, “조선(북)은 조미교전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반드시 전환된다는 확신없이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또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면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히 북한이 북·미 양자간 논의를 통한 평화보장을 우선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함.



● 美 “미·북대화 좋은 출발..대북제재는 계속”(12/11)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0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열린 북·미대화에 대해 “좋은 출발점(good start)이라고 성격을 규정한다”고 말함.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화는 미국과 북한의 관리 사이에 1년여만에 열린 첫 고위급 만남”이라며 이같이 밝힘.
-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즈워스 대표가 이미 언급했듯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관해 북한으로부터 좀 더 분명한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함. 그는 특히 “북한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회담을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할지 여부와 어떻게 복귀할지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좀 더 분명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북·미간 후속 고위급 대화 개최 문제와 관련, “(북한이 입장을 전달할) 수단이 전화가 됐건 다른 대화가 됐건간에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2차 북·미간 대화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 그는 “그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특정한 루트를 취할지는 예견하지 않겠다”고 북·미간 직·간접적 접촉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함.
- 그는 북한이 후속 대화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함.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에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평화협정 문제도 들어있는 2005년 공동성명 문제를 논의했다”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6자회담 틀내의 양자회담의 맥락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은 그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그들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고, 단정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을 위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보즈워스 대표는 북측에 분명히 했다”고 설명함.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고, 보즈워스 대표도 이번에 이를 거듭 명확히 했다”고 전함.
-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압력은 계속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874호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을 북한이 내리도록 압력을 계속 넣을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가 계속 될 것임을 분명히 함. 앞서 클린턴 장관은 북·미대화 결과에 대해 “예비



대화(preliminary meeting)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함.

● “보즈워스, 대북 관망정책 책임자” <FP>(12/10)

-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팀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때와 달리 분과주의나 내분을 대체로 피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9일 평가함. 포린폴리시는 이날 ‘누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나’라는 제목의 오바마 행정부 내 주요 한반도 정책 담당자 소개 기사를 통해 오바마의 한반도팀이 대부분 같은 입장이 라면서 이같이 분석함.
- 이 잡지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최고위층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함. 잡지는 특히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오바마 정부의 북한에 대한 느린(slow-walking) 개입 정책을 이끄는 중심인물이라고 전함. 느린 대북 개입정책이란 북한이 위협 행동을 소진하고 오바마 정부가 대북 개입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음.
- 이런 정책은 부시 행정부 1기 시절 딕 체니 부통령과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이 이끌던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 시도는 물론 부시 행정부 2기 시절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단기적 성과 생산에 집착하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고 잡지는 지적함.
- 포린폴리시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의 북한에 대한 관망정책(wait-and-see approach)의 책임자로 보인다고 평가함. 한 아시아 전문가는 “보즈워스는 힐 차관보를 감쌌던 개인적 야망 없이 평양에 갈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그가 (협상 과정에서)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과 개인적 판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잡지는 또 플레처스쿨의 학장을 겸임하고 있는 보즈워스 대표가 성 김 6자회담 특사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면서 성 김 특사의 역할을 강조함. 성 김 특사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사실상 막후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짐.
- 포린폴리시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경우 전임 힐 차관보와는 달리 아시아 지역 전반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함.
- 이 잡지는 백악관 베이더 보좌관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강력한 관계 설정에 기여했고, 그 밑의 다니엘 러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전문적인 관료라고 소개함. 이 밖에 국방부의 경우 윌리스 그렉슨 아태담당 차관보가 아시아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그 밑에서 데릭 미첼 수석 부차관보와 마이클 쉬퍼 부차관보가 서로 조율해 한반도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함.



- 아울러 경제 정책의 경우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와 제임스 로 백악관 아시아 경제담당 책임자, 커트 통 국무부 APEC (아태경제협력체) 담당 고위관리 등 3두체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함. 포린폴리시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조만간 비준은 기대되지 않고 있다면서 백악관의 정무 책임자들은 201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무역 문제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함.
- 이 잡지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와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도 주요 한반도 정책 담당자로 꼽았음. 킹 특사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누지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긴밀한 관계로 여전히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의 핵심 보좌관이라고 소개함.
- 한편 이 잡지는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팀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명확한 방안을 여전히 찾고 있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함.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과정이 정책”이라고 설명함.

● “美-中 대북정책 대조적” <美전문가>(12/9)

-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한반도전문가 존 박 연구원과 닉슨센터의 중국전문가 드루 톰슨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이틀째인 9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이같이 평가함.
- 이들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중시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투자를 받아들이는 한 중국 정부는 대북 교역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함. 당장 중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임.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중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두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무기 관련 활동 중단과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을 대북 제재에 완전히 동참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중국은 안보, 교역, 자원 확보 등에서 “지킬 것이 훨씬 많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자원안보 불안, 내정 불안정 원칙,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제재 혐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가능성을 덜 절박하게 받아들인다고 주장함.
- 특히 중국은 북한이나 이란의 핵 억제력 보유를 원치 않음면서도 제재에 나서기보다 포용정책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피할 것이라고 분석함. 이들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 및 이란과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선호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협이 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北 6자회담 복귀前 평화협정 先결론 요구”(12/9)

- 북한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 착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이런 논의없는 단순한 6자회담 복귀 압박은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북 결과를 전하며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통한) 이번 첫 대화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 프리처드 소장은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강요할 것이며, 이를 여러차례의 회담으로 하려할 것”이라고 전망함. 그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이뤄진 방북 기간에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이 휴전협정을 대신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고 확인함.
- 리 근 국장은 “북·미간의 관계를 지배할 법적으로 유효한 국제문서인 평화협정 없이는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일치(inconsistency)”가 발생하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프리처드 소장은 전함. 즉,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좀 더 확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임.
- 프리처드 소장은 특히 “리 국장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먼저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북측의) 협상 입장”이라고 전함. 이와 관련, 그는 “이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려는 논의와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슈를 만들었다”고 분석함.
- 그는 “리 국장이 더 이상 6자회담의 합의나 성명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소개함.
- 그는 방북 기간에 “수많은 기회와 경로를 통해 북한 당국자들은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에 와서 단순히 6자회담 복귀만을 말할 경우 정말 그것은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했다”고 밝힘. 그는 북한이 지난달 자신이 이끈 미국 대표단의 방북 기회를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앞선 모의 훈련처럼 간주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음.
- 프리처드 소장은 다만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이어 한 차례 더 북·미간 양자 대화를 가질 경우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 수도 있다고 전망함.
- 그는 또 이번 방북 과정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한 목표 연도인) 2012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북한의 초점은 경제개발에 맞춰져 있다”고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함.
- 그는 “북측은 이미 군사적 힘도 길렀고, 정치적·사상적 힘도 길렀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힘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3년간 세계 100%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내걸면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중이라고 확인함. 앞서 함께 방북했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전날 북한이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성공단보다도 싼 한달 30유로의 임금을 제시하면서 외국투자를 유치중이라고 전한 바 있음.

- 이 밖에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 당국자들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인공위성’ 발사로 매우 자부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리 근 국장은 “북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는 부시 정부 때의 일들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임금 30유로로 외국인 투자 유치중”(12/8)

- 북한은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기업에 개성공단보다도 싼 임금을 제시하는 등 각종 혜택을 내걸고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테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지난달 말 방북한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7일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함.
- 스나이더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공개함. 스나이더 소장은 새롭게 창설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소장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이들 방안에는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 문제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함.
- 특히 북한 당국은 한달 임금 30유로(약 44.6달러)라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짐. 스나이더 소장은 이런 임금 수준은 한국이 투자한 개성공단에서 현재 받고 있는 57.50달러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지적함. 북한 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약속에 포함된 대로 평양에 10만호의 주택을 신축할 용의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북한 천연자원에 대한 특혜를 제시하기도 함.
- 스나이더 소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우리들의 언급에 북한 무역성 관리들이 정말 놀라고 실망을 하는 것 같았다”고 전함. 그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움직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한반도 비



- 핵화를 달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그는 구체적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 거액을 주고 미국이 이들 무기를 수거해 처분했던 ‘우크라이나 모델’을 거론함.
-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의 특별한 이익에 맞는 특별한 곳’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신중히 검토할 만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이라고 말함. 그는 북한에서 플루토늄을 ‘사들이는’ 방안은 이미 2004년 한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도덕적 위험이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조치가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밝힘.
 - 한편 스나이더 소장은 미 대표단의 방북시 북한 관리들이 핵보유국으로 북한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의 입장이 ‘평화가 우선이고, 비핵화는 나중’이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함.
 -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방북 기간 비핵화를 위한 ‘행동 대 행동’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함.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8일 방북과 관련, “지금까지 양측의 공개적인 언급에 기초해 볼때 핵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질 분야가 거의 없다”고 전망함.

다. 중·북 관계

● “北고관 잇따라 방중..김정일 방중협약한 듯”(12/10)

- 최근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東京) 신문이 북한 정보에 밝은 소식통 등의 발언을 인용해 10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우동측 수석 부부장 겸 국방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함. 그는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도 친밀한 사이임.
- 또 인민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도 지난달 17~19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등과 회담함. 북한과 중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당시 김 부국장이 고(故) 김일성 주석이 2년간 다녔던 지린(吉林)시 위윈(毓文)중학교를 방문했다고 전함. 이 학교에는 김 주석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최대북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회담을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는 김 위원장이 내년 이른 시기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 신문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보와 우동측 부부장의 방중을 연관시켜서 ‘중국 공안부 간부와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김정각 부국장의 위원중학교 방문은 김 위원장의 현지 방문에 대비한 사전 탐사라는 관측도 있



다”고 덧붙였음.

라. 일·북 관계

● <北·日, 남북자 관련 대화에 ‘속도’>(12/13)

- 일본과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끈으로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갈수록 본격화하는 양상임.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12일 일본에 들러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에게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 북한간 대화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고 전함.
- 이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와 핵 문제 때문에 외교관계가 단절돼 있는 일본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하루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11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방문가능성과 관련,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갈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아직 방북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방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함.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가 9월 16일 취임 이후 방북에 의욕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임.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관계정상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북한에 납득할만한 ‘행동’을 요구해왔음.
- 따라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고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가 비록 탐색전이라고는 하지만 “성과적”이었음을 감안하면 향후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북한은 경제난 완화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함. 과거 북한은 만경봉호를 띄워 조총련 및 일본과의 무역으로 쓸쓸한 외화벌이를 했으나 지금은 외교관계 단절과 유엔 제재로 일본과의 무역이 끊긴 상태임.
-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가 시급함. 민주당 정권은 8.30 총선 공약으로 자국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내세웠기 때문임. 납치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연일 요구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일본 정부는 선거 공약 실천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관방장관과 외상, 납치문제 담당상 등 4명의 각료가 이끄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10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했던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도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음. 일본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과 한국, 유엔에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성과가 없자 중국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1일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정부로서 한시라도 빨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힘. 하지만 일본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음. 우선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진정성과 협상 의지를 확인해야 함.
-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의 동의도 얻어야 함.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당근을 북한에 주기 위해서는 대북 무역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협조도 필요함. 일본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자국민 19명이 북한으로 강제 납북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본은 이 가운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두차례 방북을 통해 귀국시킨 7명을 제외한 12명도 소재파악과 귀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왔음.

● 북송 ‘일본인 처’ 추가귀환 여론 고조(12/13)

- 북한이 조총련을 통해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을 상대로 전개했던 ‘귀환사업’ 50주년을 맞아 한반도 출신의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간 ‘일본인 처’의 귀국을 성사시켜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13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처 귀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정책연구회’는 지난 11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에게 일본인 처의 귀환을 위해 정부가 외교 문제로 이를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음.
- 이민정책연구회의 마쓰모토 에이도쿠(坂本英徳) 대표는 “북한은 과거 50년간 일본인 처의 본국 귀환을 막고 있다”면서 “일본인 처의 귀국은 긴급을 요하는 내국인 보호 문제”라고 주장했음. 1959년 시작된 북한의 재일동포 귀환사업으로 북송선을 탄 재일동포와 일본인은 모두 9만3천34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인 처’는 1천831명임.
-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간 일본인 처들은 본국으로부터 엔화를 끌어오는 ‘엔화 송금 기계’로 이용당하면서 생활고와 질병, 차별로 고통을 받다 대다수가 사망하고 현재 생존자는 1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대부분의 북송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처들에게도 북한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음.
- 일본인 처를 귀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43명을 귀국시켰으나 이후 북·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추가 귀국자는 나오지 않고 있음.
- 북한의 재일동포 귀환사업은 한국과 민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일 한국인을 줄여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일본과 노동력



및 외화가 부족했던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대규모로 이뤄졌음. 북송된 일본인 처의 가족들은 작년에 ‘귀환사업’을 주도한 조총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인 20년이 지났다며 기각했음.

● 하토야마 “북한, 필요하면 가겠다”(12/12)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11일 보도함.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위한 방북 가능성과 관련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갈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함. 그는 그러나 “아직 방북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방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함.
-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가 9월 16일 취임 이후 방북에 의욕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임.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관계정상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북한에 납득할만한 ‘행동’을 요구해왔음. 따라서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의 강경한 자세에 비해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로,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됨.
-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정부로서 한시라도 빨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힘. 그는 또 납치피해자의 귀국 실현과 진상 규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민주포럼’에 참석해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음. 하토야마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내걸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관방장관과 외상, 납치문제 담당상 등 4명의 각료가 이끄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은 이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과 한국, 중국에 납치자 문제 해결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성과가 없자 북한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인터뷰> 북·일정상회담 주역 다나카 히토시(12/9)

- 다나카 히토시(田中 均) 전 일본 외무성 아·대양주국장은 8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핵 및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대규모 경제지원도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봄.
-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북·일정상회담을 만들어낸 인물 중 한 명인 다나카 전



가는 동안 아제르바이잔과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등에서 세차례 재급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페투코의 증언이 나오기 전에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테러범들이 암약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중동 지역 등이 최종 목적지로 거론됐었음. 페투코는 비행 일정에 대해서는 순순히 자백했지만 자신과 동료 승무원들의 무기 운송 혐의는 전면 부인했음. 페투코는 “수송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상품 수송을 위해 고용됐다”며 “수송기에 무기가 적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억류된 수송기에는 페투코 등 벨로루시 출신 4명과 카자흐스탄 출신 1명이 승무원으로 탑승하고 있었음.
- 한편, 스리랑카군은 이날 태국 당국에 억류된 수송기가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음. 우다야 나나야카라 스리랑카군 대변인은 “수도인 콜롬보에 착륙하기 위해 착륙 허가를 신청한 북한 비행기가 없었다”고 밝혔음.

● 泰, 北무기보고서 45일내 유엔 제출(12/13)

- 태국 정부는 평양발 수송기에서 압류한 북한 무기와 관련한 보고서를 45일내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더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13일 보도했음. 태국 당국은 12일 미사일 등 북한산 무기 35t을 적재하고 평양을 출발, 재급유를 위해 돈므엥 공항에 착륙한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와 승무원들을 억류하고 수송기에 적재돼 있던 북한산 무기는 전량 압류했음.
- 타니 통팍데 태국 외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무기 선적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음. 태국 경찰은 북한산 무기를 수송기에 적재한 조종사 등 승무원 5명을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무기 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4일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태국 법과 유엔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억류된 수송기는 그루지야 국적이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아피싯 총리는 “보안 및 정보기관이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며 “문제의 수송기가 당초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최종 목적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태국 매체는 승무원들이 이 비행기의 목적지가 파키스탄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 태국 정부는 15일께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송기에서 압류한 무기류를 정밀 검사하도록 할 방침임.



● 泰, 北미사일 등 적재한 수송기 억류(12/13)

- 미사일과 폭약 등 북한제 무기를 적재하고 평양을 출발했던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태국 돈므엥 공항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한 뒤 태국 당국에 억류됐다고 교도통신 등 외신과 태국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함.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대변인은 “문제의 수송기 조종사가 12일 오전 재급유를 위해 돈므엥 공항 착륙을 요청했다”며 “이 수송기가 공항에 착륙한 뒤 당국이 수송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를 발견, 수송기와 조종사 등을 억류하고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힘.
- 파니탄 대변인은 “압수된 무기들은 태국 중앙부의 나콘사완주(州) 타크리 공군 기지로 이송됐다”며 “억류된 조종사들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함. 안보담당인 수텡 타웅수반 태국 부총리는 “억류된 조종사 등은 당초 수송기에 원유 시추용 장비들을 운반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송기 검사 과정에서 무기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억류된 수송기는 그루지야 국적이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알려짐. 또 태국 당국이 구체적인 압수품 목록을 아직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미사일과 폭약, 대공화기 발사대, 로켓포 등 35t 정도의 무기가 수송기에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파니탄 대변인은 “조종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제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유엔 당국의 의견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이 수송기의 출발지와 관련, 몬톤 수추콘 태국 공군 대변인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문제의 수송기는 북한 수도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공군 당국이 억류된 항공기에 대해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목적지에 대해서는 억류된 수송기가 올해 중반 내전이 종식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태국 현지 방송들은 태국 당국이 미국측 정보를 받아 이 수송기를 억류했다고 보도했지만 태국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수송기에 다량의 무기가 적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수송기 억류는 정보 기관들의 공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주태국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태국 당국이 억류된 조종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사건 경위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나이 한 살 위로 변경”<NHK>(12/10)

-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3남 정은의 나이를 당초 설명보다 한 살 많은 27세로 변경했다고 NHK가 북한 내부 동향에 밝은 복수의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10일 전함. 방송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과거 외국의 고위 관료들에 대해 정은씨가 1983년 1월 8일생이라고 설명해 왔음.
- 북한은 그러나 올해 6월부터 출생연도를 1년 이른 1982년생으로 변경하고 “김 위원장이 70세가 되는 2012년에 정은이 30세를 맞는다”고 강조하고 있음. 2012년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100세 생일이 되는 만큼 북한은 이 해에 ‘강성대국’으로 내딛는 것을 국가 목표로 내걸고 있음.
- 북한 지도부로서는 “정은이 조부의 탄생 100년을 맞는 해에 부친과 함께 아주 좋은 나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카리스마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령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지적함. 방송은 북한이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연령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정은의 생일 변경도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불허(12/10)

- 북한은 9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및 접근을 허용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7일 북한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내용 및 북한 측 회신을 토대로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47개 회원국들이 내놓은 50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117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통보함.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고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라는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서방국가들의 권고를 거부함.
- 또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의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반면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17개 권고사항 중에는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방북이 포함됐고, 고문방지협정(CAT)과 인종차별철폐협정, 이주자권리협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가입 여부 등도 열거됐음.
- 또 북한 측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국가인권기구 설립,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통신, 상봉 정례화 등을 검토 대상에 일단 포함시켰음. 이번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사무국과 3개 간사국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등이 논의해 채택한



것으로, 내년 3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이 나옴.

- 한편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 특사는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이번에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대화의 시작으로서 유용했다고 본다”며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북한 인권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권고사항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함.
- 킹 특사는 북한이 이번 정례검토에서 아동 등의 영양실조 문제를 ‘과거지사’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북한내 상황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영양실조 문제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고, 방북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답변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12.12 사태’ 관련 보고서 요지>(12/9)

- 다음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1979년 12.12 사태 발생 8일 후 작성한 ‘남한내 불안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특별평가보고서의 요지임. ▲남한 군부 파벌간 싸움의 표면화와 남한의 만연한 사회적 무질서는 평양(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무력 재통일을 검토하도록 재촉하고 있음.
- 미국이 이란과 기타 지역의 일들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을 지킬 미국의 능력 또는 의지가 약화됐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음. 평양이 직면한 결정의 무게와 이에 따른 위험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인지 확신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최대 50 대 50이 될 수 있음.
- 만일 북한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한다면, 아마도 이는 남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남한내) 조직적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massive assault)’이 될 공산이 큼. 김일성 주석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발생한 남한 군부파벌간 다툼과 광범위한 사회 무질서가 자신이 권좌에 있을 때 한반도를 재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음.
- 1975년 김 주석은 “북한은 남한내에 ‘혁명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이후 북한은 이를 선전해 왔음. 김 주석은 사석에서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1961년 군사 쿠데타 사이의 혼란한 시기에 북한의 군대가 이를 이용할 만큼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하곤 함. 지난 10년간에 걸친 북한 군사력의 두드러진 팽창을 감안할 때 김 주석은 이전보다 그런(군사) 행동을 취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음.



- 북한은 군사적으로 취약해진 남한에 대한 공격을 검토할 때 남한의 주요 동맹들의 태도, 특히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저울질하게 될 것임. 수년간 소련과 중국은 김일성에게 경고를 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북한의 군사적 자급력이 향상되면서 감소해 왔음. 만일 김일성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그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면, 과연 중국과 소련이 이런 (군사적) 모험을 반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우리는 남한에 미군의 주둔이 없다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리라고 판단함. 미국 지상군의 존재와, 어떤 규모가 됐든 북한의 도발시 미군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은 북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1970년대에 걸쳐 북한의 핵심적인 목표는 남한에서 미군의 주둔을 종식시키는 일이었음.
- 북한은 (남한을 도발하려 한다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국의 관심사항과 개입문제도 고려 대상에 넣을 것임. 현재 미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문제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군사행동 위험을 줄여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름. 반면 북한은 이란사태(이란의 미국대사관 외교관 52명 인질사건)에 대한 미국의 좌절과 분노를 미국이 주한미군을 겨냥한 공격에 응전할 용의를 드러내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할 수도 있음.
- 북한은 또한 미국의 신속대응 능력도 판단하게 될 것임. 만일 미국이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하게 된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할 것임. (따라서) 북한이 (남침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게되는 것은 남한 및 동북아 다른 지역내의 미군, 혹은 (한반도 투입에) 이용하기 위해 예비돼 있는 미군이 될 것임.
- 북한은 ▲위험을 최소화한 제한적인 군사개입을 통해 미국의 (대남) 방어 의지와 남한내 분열을 조장하려 들거나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북한은 첫번째 코스는 거부할 것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강도가 약한 다양한 행동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함. 이런 경험에 비추어 북한은 제한적인 행동은 실제로는 순손실(net loss)이 된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개입은 육,해,공을 두루 동원한 대규모 형태를 띠 것으로 생각함. 북한의 일차적 목표는 서울지역을 장악하는 것이겠지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것임.
- 우리 판단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작전이 성공하는 한 남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침략을 계속 시도할 것임. 북한의 늘어난 군사조직, 병력, 장비는 2년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할 것임.
- 평양과 동맹관계인 소련과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신중하게 반응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됨.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개선되고 있는 관계가 위협에 처하는 것을 꺼릴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고, 북한에서 자신들에 대한 호의적인 상태를 유지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에 최소한의 물자적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임.

● 한·미연합 공중강습훈련 실시(12/8)

- 육군은 8일 제7기동군단과 미국 2전투항공여단이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 여주군 강천리와 홍천군 모곡리 일대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을 한다고 밝힘. 이번 훈련에는 7군단 예하 강습대대와 109, 601 항공대대, 미 2항공여단 소속 아파치 헬기 등 각종 헬기 28대, 병력 900여명이 참가함.
- 작전계획 시행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훈련은 강습대대원들이 최초 집결지 및 탑재지역을 점령한 뒤 공중강습작전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적지역의 집결지를 확보하게 됨. 공중강습작전 중 미축 아파치 헬기가 기동헬기를 앞뒤에서 엄호함.
- 육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연합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상작전 부대와 항공지원 부대 간 협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해 한·미연합 공중강습작전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시진핑 “한·중 FTA. 東亞공동체 실현 희망”(12/12)

-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1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공동체가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그는 또 중국이 아직 ‘G2(주요 2국)’에는 못 미친다면서 “세계의 문제를 1~2개 국가가 맡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함.
- 시 부주석은 방한을 4일 앞둔 이날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한·일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관계 추진(발전)에 중요한 동력”이라면서 한중 FTA가 실현되면 경제·무역관계에서 더욱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시 부주석은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한국(16~18일),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4개국 순방에 나서는 데 부주석 취임후 4번째 이뤄지는 외국 순방에서 상대국 기자들과 사전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는 한·중 FTA와 관련, “한·중 양국간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FTA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만 의견차도 있다”면서 “산업별 수요와 수용 능력을 감안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시 부주석은 특히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



- 둔다) 정신을 발휘해 우선 의견이 일치한 것부터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에 착수할 것을 바란다”고 밝힘.
- 그는 또 한·중·일 협력구상에 대해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본단계”라면서 “한·중·일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며 특히 한·중은 인접하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국민간 우호 교류의 역사교류가 깊어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함.
 - 시 부주석은 “3국간 협력이 이뤄지면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로 이어져 역내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최근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한·중·일 간의 역사적인 기회를 잘 이용해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를 창조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함.
 -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시 부주석은 “각 당사국은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살려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시 부주석은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중 양국이 상호 고위층 교류 등을 통해 각 분야에서 전략적 관계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함.
 -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주요 2국)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시 부주석은 “중국은 책임감을 갖고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겠지만 아직 G2에는 못 미치며 세계의 문제를 1-2개 국가가 맡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함. 시 부주석은 한국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일 서울에 도착해 18일까지 머물며 방한 기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형오 국회의장, 정운찬 국무총리와 회동 및 회담함.

● 韓-中 투자 불균형 심각(12/7)

-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규모가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의 10% 수준에 그쳐 한·중 양국간 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주중 한국대사관은 7일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는 총 273억달러(중국 통계 기준 431억달러)이지만 중국의 대한 투자규모는 올해 6월 기준으로 25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힘.
- 중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제1의 투자대상국이었으며 2008년에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중국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25억달러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에 투자한 액수와 거의 같은 액수로 경제 및 교역 규모를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중국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이른바 ‘해외로 나가자(走出去)’는 전략을 쓰면서 대외 투자 규모를 급속히 확대해 왔지만 이 전략은 한국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임. 중국의 2003년 대외투자 규모는 28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4년 55억달러, 2005년 122억달러, 2006년 211억달러, 2007년 265억달러, 2008년 521억달러로 급



속히 증가했으며 올해의 해외 투자규모는 사상 최대인 800억~1천억달러로 예상되고 있음.

-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 투자가 적은 이유로 “중국이 우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에너지 자원 분야의 투자가 많은 데다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중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함. 이에 따라 한국 투자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올해 들어 한국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금융과 IT(정보기술), 물류 등 한국의 강점을 홍보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한·중간 투자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다. 한·일 관계

● 오자와 “외국인 지방참정법안 내년 초 처리”(12/12)

- 한국을 방문 중인 오자와 이치로(小澤日郎) 민주당 간사장이 12일,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관련 법안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자와 간사장은 이날 서울 국민대에서 강연이 끝난뒤 질의 답변에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국가의 정치적 자세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제출 법안이 돼야 한다”면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현실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함.
- 일본의 정기국회가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오자와 간사장의 발언은 조기에 한국 동포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오자와 간사장은 일제의 한국 강점과 지배에 대해 “일본국, 일본 국민으로서 사죄해야할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사죄’를 명확히 함. 그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관련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극동지역이다”면서 한·중·일 3개국 신뢰 관계와 제휴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신뢰관계를 확립하면 북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평화를 위해 큰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오자와 간사장은 이날 서울시내 호텔에서 수행기자들에게 일왕의 방한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이 환영해준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함.

라. 미·중 관계

● <中 언론 “오바마 무기팔면서 노벨평화상”>(12/11)

- 중국 언론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소식을 전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냄.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1일자 증문판 및 영문판 모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을 사진과 함께 1면에 대서특필하면서 제목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무기를 판매한다”라고 뽑아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함.

- 로버트 코백 미국 국무부 부(副)차관보 대행은 9일(현지시각) 대만에 디젤-전기 잠수함 설계기술과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판매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의 추가 판매와 육해공군 통합지휘통신망인 ‘포성’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샀.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함.
-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장을 들고 밝게 웃는 모습을 실으면서 노벨상 수상자가 무기를 팔고 있다고 비꼬았음. 신문은 또 전문가를 인용, 노벨상 수상자가 시소계 임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대만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함.
- 중국 언론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을 통해 전쟁은 참혹한 것이지만 때때로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은 불가피하다면서 한국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수행해온 전쟁들을 옹호했다고 전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문제에서 중·미간 협력강화를 다짐한 바 있음.

마. 미·일 관계

● <美·日 후텐마 ‘마이웨이’..동맹균열 심화>(12/13)

- 오키나와(沖繩)현의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음. 두 나라의 입장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어져 미·일 양국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 미국은 기존 미·일 합의사항인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오키나와현) 이전 외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의 연립 3당은 아예 미군 재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음.
- ◇ 美 “18일까지 결론내라” 日에 통첩 = 미국이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8일까지 결론을 내라고 일본에 통첩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함.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인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郎) 정조회장을 만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런 뜻을 전했다는 것임.
-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키나와의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결론이 지연될 경우 팜으로의 미 해병대 이전 관련 경비를



- 포함한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함. 미국 정부는 일본이 오키나와 나고시로 후텐마기지를 이전키로 한 기존 미·일 합의 사항에 대해 ‘예스’든 ‘노’든 확실한 방침을 밝혀줄 것을 요구함.
-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하토야마 정부의 말바꾸기에 지친 미국이 일본에 ‘최후통첩’한 것으로 해석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힘.
 - ◇ **日 연립3당 “미군재편 재협상 요구”** = 일본의 연립 정권은 한 수 더 떠 아예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괌으로의 해병대 이전 등 미군재편 전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이 후텐마 이전 문제를 비롯한 미군 재편과 관련, 미국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하토야마 총리와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소비자담당장,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亀井靜香) 금융·우정상이 지난 11일 밤 회동에서 이런 방침에 합의하고 금주 초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임. 당연히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지역 결정도 유보하기로 함.
 - 연립 3당은 이미 민주당 정권 출범 직전인 지난 9월 ‘미군 재편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이에 근거해 2006년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후텐마기지의 나고시 이전계획과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등 미군 재편의 로드맵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해왔음.
 - 이와 관련,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12일 “총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일·미 합의에 기초해 나고시로 후텐마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사를 중시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함. 미·일간에 합의한 나고시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 후텐마기지를 옮기겠다는 것임.
 -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가 기존 미·일 합의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미군 재편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미국 측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됨.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연립 정당 수뇌와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기존 일·미 합의대로 하자는 미국에 ‘예스’하고 문제를 마무리할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신정권으로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새로운 길’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미국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방안이 기존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미국의 ‘이해’를 얻긴 어려워 보임.
 - 미국은 기존 합의를 하토야마 정부가 수용하면 기지 내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일본 정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조향을 바꾸는 등 일부 지위협정을 미세 조정 할 수 있다는 양보안까지 제시한 상황임.



-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멀어지면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

● “日외무성 오키나와밀약 문서 폐기의혹”(12/13)

-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沖繩) 반환 당시 미국이 지불해야할 미군 용지 원상복구 보상비를 일본이 대신 지불기로 한 ‘오키나와 밀약’ 문서가 일본 외무성에 보관돼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함.
- 미·일 외교 밀약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전문가위원회는 외무성을 통해 ‘오키나와 밀약’ 문서발굴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함. 오키나와를 반환하면서 미국이 지불해야할 미군용지 원상복구 보상비 400만 달러를 일본이 대신 부담기로 한 오키나와 밀약의 존재는 이미 공개된 미국의 외교문서와 당시 일본 외무성의 담당 국장이었던 요시노 분로쿠(吉野文六)씨의 증언으로 밝혀짐.
- 오키나와 밀약 서명 당사자인 일본 외무성의 전 아메리카 국장이었던 요시노씨는 최근 법정 증언에서 밀약이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서명했다고 증언함. 오키나와 밀약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외무성이 밀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폐기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과거 자민당 정부는 “오키나와 밀약은 없으며 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밀약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음.

● “美, 지위협정 환경조항 日에 양보 용의”(12/12)

- 미국이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을 같은 현내 나고(名護)시로 이전기로 한 기존 미일 합의사항을 일본이 수용할 경우 미일 지위협정의 환경조항 등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함. 이는 미국이 기지 주변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지내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현장 직접 조사를 용인하겠다는 의미임.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 4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후텐마 이전을 위한 실무협약에서 일본이 기존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일 지위협정에 환경조항 추가 ▲후텐마 비행장 훈련의 조기 이전 ▲미군 시설에 대한 미군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 설치 등을 공식적으로 제의할 방침이었음.
- 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연립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의 반발을 수용해 기존 미일 합의안인 나고시로의 이전대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고 내각에 지시하자 미국도 타협안의 공식 제시를 미뤘음.
- 그동안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미 지위협정의 환경조항을 바꿔 기지내 환경오염에 대한 현장 직접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음.
- 현재 한국과 독일에서는 기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기지내



환경오염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환경조항에 명시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미군이 허용할 경우에만 현장조사가 가능함.

- 미일 지위협정은 재일 미군의 시설과 주둔지역, 군인 및 가족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으로 1960년에 체결·발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용의자의 신병 인도를 미군 재량에 맡긴 형사재판권도 문제가 되고 있음.

바. 미·러 관계

● 미·러 정상 전략핵무기 감축 협의(12/1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전략핵무기 감축을 협의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전함. 러시아 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전화로 지난 5일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후속협정 체결의 의의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되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 두 정상은 또 제네바 협상단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고위급 협력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START-1은 옛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체결된 것으로 전략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임.
- 미·러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새 협정 발효 후 7년 내 양국의 핵탄두 수를 1천500~1천675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인다는 후속협정 초안 양해각서에 서명함.

사. 중·일 관계

● <일왕 면담 정치이용..오자와에 화살>(12/13)

- 내각의 압력에 의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특례면담 파문이 증폭되고 있음. 일본 언론은 지난 11일 하케다 신고(羽毛田信吾) 궁내청 장관의 기자회견으로 왕의 특례 면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일 내각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13일에도 주요 신문들이 사설과 기사 등으로 내각의 왕 정치이용에 큰 우려를 표시함.
- 논란이 커지면서 시진핑 부주석의 일왕 특례 면담을 무리하게 추진 하도록 배후에서 밀어붙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에게 비판이 몰리고 있음.
- ◇ “원인 제공자는 오자와”: 요미우리신문은 오자와 간사장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에게 시진핑 부주석의 왕 면담을 성사토록 부탁했고, 하토야마 총리가 관방장관을 통해 궁내청에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함.
- 오자와 간사장은 11월 하순 중국측으로부터 시진핑 부주석의 일왕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달 4일 하토야마 총리에게 전달했고 9일에는 직접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궁내청이 '1개월전 면담신청 관행에 어긋난다'며 반대함.

- 이에 일본주재 중국 대사가 오자와 간사장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자 하토야마 총리에게 재차 시진핑 부주석의 왕 면담 주선을 요청했고, 결국 하토야마 총리가 히라노 관방장관을 통해 압력을 넣어 면담 일정을 잡았음.
- 14일 방일하는 시진핑 부주석의 일왕 면담 일정이 15일로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전인 11월 15일까지 면담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
- '일왕 접견 1개월 전 신청 룰'은 1995년부터 관행으로 굳어짐. 고령인 왕의 행사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2004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로는 엄격한 룰이 됐음. 지금까지 이 룰은 2005년 태국의 상원의장이 방문했을 때 접견 신청이 하루 늦었던 것을 제외하면 철저히 지켜졌지만 시진핑 부주석의 '특별 면담'으로 완전히 허물어짐.
- 이에 대해 언론들은 왕의 외국 인사 면담 일정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어느 국가에나 공평하게 결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1개월 전 면담신청 룰'은 지켜져야 하지만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관행이 훼손됐다고 비판함.
- 특히 시진핑 부주석의 무리한 일왕 면담 추진은 오자와 간사장이 140여명의 국회의원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오자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성'이 있었다는 지적임.
- 하토야마 총리는 그러나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시진핑 부주석의 왕 면담을 추진했을 뿐 오자와 간사장의 부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함.
- ◇ **일왕 한국 방문 문제에도 불똥 가능성:** 이번 파문은 일왕의 한국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보수지인 산케이신문은 일왕의 방한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함.
- 한국을 방문한 오자와 간사장은 12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기자들에게 일왕의 방한 문제와 관련 "한국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면 (왕의 방한이) 좋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일왕의 방한을 위한 과거사 문제 정리, 안전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자와 간사장이 왕의 방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함.
- 이 신문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 당시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인 내년 왕의 방한을 기대했지만 "내년에는 한국에 내셔널리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과거사 문제에 천황의 사죄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일본 국내에서는 천황의 방



한에 대한 반대론이 강하다”고 전함.

- 이 때문에 한류 팬인 하토야마 총리도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 오자와 간사장이 일왕 방한이 ‘괜찮다’고 한국에서 밝힌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임. 니혼게이지이 신문도 “여당 간사장의 발언으로 한국에서 천황의 방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궁내청이 우려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뜨겁게 돌아오르는 中·日관계>(12/11)

- 지난 8월 집권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미국 편중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의 중점을 아시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중일관계가 뜨겁게 돌아오고 있음. 역사문제와 동중국해 영토 분쟁 등으로 냉각관계에 있던 중국과 일본이 2006년 해빙을 맞은 이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밀월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임.
- 중국과 일본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일본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부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민주당 고위 지도부와 폭넓은 교류를 가져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임. 양국은 정상들이 상대국을 상호 방문하는 화려한 정상외교보다는 차세대 지도자들과 지방 고위직들의 교류를 통한 저변 외교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음.
- 중국의 잠재적 대권후보로 꼽히는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서기는 지난 11월 초 일본을 방문해 하토야마 총리와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경제산업상 등과 만남. 그는 일본에서 52억8천30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력서와 무역협정에 서명함. 또 왕양 당서기의 정치적 라이벌인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직할시 당서기도 내년 초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
- 보시라이 당서기는 중국 혁명원로 및 고위간부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太子黨) 계열로, 태자당의 대표 주자는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임. 시 부주석 역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함.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 국가지도자의 첫 방문”이라면서 “이번 방일을 통해 중일 양국의 정치 신뢰 제고와 상생 협력, 양국민 간의 우호적 감정 강화, 전략적 호혜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함. 일본은 시진핑 부주석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준비하고 있음. 일본이 파격 대우를 해주는 징후는 일왕이 시진핑 부주석을 만나기로 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음.
-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궁내청은 당초 일왕과 시진핑 부주석의 면담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음. 외국 요인이 일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통상 면담 예정일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하지만 중국측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난달 말 면담을 추진했기 때문임. 그러나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궁내청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이례적으로 면담을 수용



- 하기로 입장을 바꿈. 하토야마 총리가 정치적으로 중·일관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면담을 성사시켜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는 후문임.
- 이에 앞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함. 양국 외무장관들은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하고 지구 온난화 등 국제 쟁점들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함. 일본 집권 민주당의 최고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도 10일 643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함.
 - 이들 대표단에는 하타 쓰토무(羽田孜) 전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아타나베 고조(渡部恒三) 중의원 부의장을 비롯해 일본 전체 의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43명의 의원들이 포함돼 있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오자와 간사장 일행을 극진히 예우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선언함.
 - 오자와 간사장도 “140여명의 국회의원이 한 나라를 한꺼번에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다”면서 “양국의 우호 친선 관계를 발전시켜려는 노력을 중국 측도 알게 됐을 것”이라고 화답함. 눈길을 끄는 것은 양국간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임.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지난달 27일부터 12월1일까지 일본을 방문함.
 - 그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국방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사상 처음으로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기로 합의함. 과거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등에 따른 역사적 양금이 남아 있는 양국군이 합동 군사훈련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타자와 방위상도 량 부장의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참모총장)도 내년에 중국을 찾기로 함.
 -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최근 상호 교류가 확대되면서 상대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쪽으로 외교정책을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고 말함. 중국은 일본이 제창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 공동 대응이나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음. 일본도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양국 역사문제나 대만문제, 티베트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아. 기타

● “中 지하에도 ‘만리장성’..핵미사일 은폐”(12/13)

-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하에 핵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을 숨겨둔 ‘지하 만리장성’을 파놓은 것으로 밝혀짐. 중국 중앙(CC)TV는 12일 인민해방군 기관지 중국국방보를 인용, 중국의 전략미사일부대인 제2포병부대가 미사일을 은폐한 지하 동굴을 건설했다고 보도함.
- 중국국방보는 제2포병부대 공병부대의 지하 미사일 기지 건설현장은 대낮처럼 불이 밝았다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지하 만리장성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함. 이와 관련,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하 미사일 기지는 상당히 견고하다”면서 “지하병커 파괴용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수십만t급 핵탄두 몇기를 퍼부어도 일부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들은 “중국 제2포병부대의 가장 중요한 지하 미사일 기지는 화북 지역 모산악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내부 터널 길이가 모두 5천km에 달하고 있으며 이곳에 전략 핵탄두가 있다”고 말함.
- 대만의 군사전문지 ‘아태방무(亞太防務)’도 최근 “중국의 초기 중장거리미사일은 모두 지상 진지에 배치돼 정찰위성과 요격 미사일 공격에 무력했다”며 따라서 “중국은 모든 미사일 기지를 수백m 아래 지하 동굴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전함. 잡지는 “이를 위해 제2포병부대 병력 수만명이 1995년부터 10년에 걸쳐 지하기지를 건설했다”고 설명함.
-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밀리에 건설한 지하 만리장성은 2차 핵공격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중국 제2포병부대의 최대 임무는 적의 핵미사일 공격을 피한 뒤 적의 목표지점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 언론이 전략시설인 지하 만리장성에 관한 국가기밀을 공개한 것은 작전체계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함.

●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내년 중국으로 직통>(12/13)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직접 수송하는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개통됨. 후진 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2일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회사인 카즈무나이가즈 본부에서 열린 천연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함.
- 이 천연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까지 연결하는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의 카자흐스탄 구간임. 총연장 7천km인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은 AB 쌍선으로 건설되며 A선은 다음 달 초 시험 운전해 들어가고 B선은 내년 4, 5월 완공과 함께 운행에 들어가 세계 최장 가스관으로 태어남.
- 후 주석은 14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자리를 옮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국 대통령과 함께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 공식 개통식을 거행함. 중국은 서부지역 천연가스를 동부로 운송하기 위한 ‘서기동수(西氣東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서기동수 2기 공사를 하고 있음.
- 앞서 중국은 지난 2004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간쑤(甘肅), 산시(山西),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장쑤(江蘇)를 지나 상하이에 이르는 4천km 길이의 서기동수 1기 공사를 완공함. 오는 2011년 완공



예정인 서기동수 2기 구간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 남부지역 14개 성·시, 자치구를 거쳐 홍콩까지 이르는 것으로 총연장 8천94km의 세계 최장 가스관이 될 예정이다.

- 따라서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서기동수 1기 및 2기 구간과 연결되면 중국 동부와 중부는 물론 남부지역까지 거의 전국이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됨. 중국은 이를 위해 천연가스가 풍부한 중앙아시아 각국에 무상차관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펼치며 자원 외교를 벌여왔으며 이번 공식 개통식은 중국 외교의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 한·캐나다 정상 “FTA협상 진전 노력”(12/7)

-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전을 이루도록 힘을 모으기로 함. 이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캐나다 FTA가 양국간 무역 확대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 단계 격상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FTA 협상이 진전하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함.
-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자원대국 캐나다와 한국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만큼 FTA 효과가 클 것”이라며 “양국이 FTA를 조기에 타결한다면 G20 주최국인 양국이 자유무역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함. 양국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내년 11월과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점에 언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의제 설정 등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음.
- 두 정상은 또 캐나다에 거주하는 22만명의 우리 동포와 연간 30만명에 달하는 양국민간 상호 교류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환기하고 이 같은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자는 데도 공감함. 이 대통령은 북핵 일괄타결 해법인 ‘그랜드 바진’ 구상을 설명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캐나다의 기여를 평가했으며, 이에 대해 하퍼 총리는 한국의 입장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이어 이 대통령은 하퍼 총리가 한국계인 연아 마틴 상원의원을 추천, 임명해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사례했고, 우리 기업의 캐나다 내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퍼 총리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함.
-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소개하고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함. 이밖에 양국 정상은 양국이 ‘특별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를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온 점을 평가함. 이 대통령과 하퍼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하퍼 총리의 방한은 처음임.



[참고 1] <그래픽> 북한제 무기적재 수송기 태국 억류(12/13,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미사일과 폭약 등 북한제 무기를 적재하고 평양을 출발했던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태국 돈므엥 공항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한 뒤 태국 당국에 억류됐다고 교도통신 등 외신과 태국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음.
전승엽 기자 kirin@yna.co.kr



반종빈 기자 bjb@yna.co.kr / 20091213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Gallery/YIBW_showPhotoNews_New.aspx?contents_id=GYH20091213000200044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